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와 시민의회의 제도화 전망: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의 특징과 함의

서현수(한국교원대)

2023.10.21./

한국정치사상학회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적 위기와 도전들

- **선거-정당-의회 중심의 표준적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비판과 좌우 포퓰리즘 확산:**
  - 정기적 선거를 통해 '권력의 위임과 책임성'(power delegation and accountability)을 담보하는 표준적 대표 메커니즘의 한계
  - 공동체의 정치적 의지를 형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이익과 갈등을 중재하는 핵심 정치 행위자로서 정당의 역할이 도전받고 있음.
  - 기성 정당들과 의회 등 중앙 대의 기구들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 소외, 불신 심화
- **더 많이 교육받고 덜 만족하는 '비판적 시민'들의 출현**
  - '선거 사이'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더 많은, 더 직접적 참여 요구
  - '능동적'(active) 시민과 '수동적'(passive) 시민 간 새로운 차이와 불평등 확대

-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속 불평등체제의 (재)심화와 글로벌 기후위기 등 '사악한 문제(wicked problems)'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
- 전통적 좌우 구분을 뛰어넘는 다양한 정치적 균열 분출: 새로운 사회계약의 필요성 + 정체성 정치의 한계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기반 시민정치의 양면성: 정보 공유와 투명성 증대 vs. 정치적 극단화, 파편화
- 근대 대의 민주주의가 기반한 정치적 대표의 개념, 원리, 제도 등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제도적 상상력 필요

❖ ***"정당과 대의 기구들의 역할에 기반한 고전적 – 표준적 또는 '교과서'적 민주주의 모델은 더 이상 우리의 정치 시스템을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다."*** (Papadopoulus 2013: 3)

- 후기 근대적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에서 새로운 민주 정치적 조건에 부합하는 열린, 포용적 정치 시스템과 문화의 정립이 요청됨
  - 전통적(표준적) 형태의 대의 민주주의 개혁 압력 증가
  - 직접적 & 질적(숙의적) 형태의 시민 참여 확대 요구
  - 다양한 형태와 유형의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 확산

❖ 글로벌 기후위기, 불평등 (재)심화, 포퓰리즘 확산, 감염병 팬데믹, 재난 자본주의 등 전환기의 핵심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과 역동적 민주주의**의 구상 및 실천이 요청됨.

민주적 혁신(democratic innovations)의 이론과 실천

▪1960-70년대 이후 참여 민주주의적 전환(participatory turn)

- **모든 층위**의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를 참여적, 민주적으로 개혁할 것을 주장(Pateman 1970, 2012); '강한 시민사회'에 기초한 '**강한 민주주의**strong democracy'(Barber, 1984); 참여 경험의 **시민교육** 효과 강조
- 정보공개법, 옴부즈만 등 다양한 권력 모니터링 제도, 정당 내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local democracy), 직장 민주주의(workplace democracy), 가정과 학교의 민주화, 성 평등 운동, 문화 민주주의, Open Data/ Open Government 운동 등에 지속적 영감과 아이디어를 제공
- 후기 근대적 정보자본주의 사회로의 이행과 새로운 자본의 전략으로서 참여적 커뮤니케이션 전면화: **소비자-시민(consumer-citizen)**의 사회?

▪1980-90년대 민주주의의 '숙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 선호 집약적(aggregative) 다수결 민주주의와 협상 민주주의의 한계 비판
-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 간의 충분한 '숙의'(deliberation) 과정을 통해 **더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정책 결정**에 도달 가능하다고 주장
- '이상적 담화상황' 또는 공정한 토의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디자인 고민

✓ *The "institutionalization of a greater degree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in the processes of political decision-making will improve the **legitimacy of decisions** by fostering mutual understanding, improving the quality of decision, and by developing better citizens."* (Davison & Elstub 2014: 369)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진화와 혁신

- 하버마스(1996), 롤즈(1993): 숙의 민주주의 이론의 규범적 정당화
- 2세대 이론가들: 숙의민주주의론의 규범적 이상을 불평등하고 다원적이며 복잡한 현실 조건에 대면시킴; Young(1996), 합리주의적 숙의 개념의 한계 지적하며 포용적 의사소통(여성, 소수자, 비이성주의적 서사의 발언권 보장)의 중요성 강조
- 2000년대 전후 숙의 민주주의의 **경험적 전환(empirical turn)**
- 2010년대 이후 숙의 민주주의의 **체계적 전환(systemic turn)**

숙의민주주의의 '경험적 전환'(empirical turn)

- 숙의 민주주의의 '**실행, 제도적 디자인, 평가**'(implementation, institutional design, and evaluation)에 관한 연구 확대: 이론적, 규범적 담론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 (Ryfe 2005)
- 그러나 숙의 민주주의적 실험들이 주로 '**미니 퍼블릭**' 형태의 단일한 숙의 포럼들과 비-의회적 실천들에 초점을 둠으로써 거시적 수준의 정치적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Chamber, 2012; Seo, 2017; Lafont, 2019)

❖ Pateman (2012: 10): 숙의적 미니퍼블릭은 "전체 대의 정부 체제나 민주주의 제도 속으로 통합되지 않았고, 공동체 생활의 일상적 정치 사이클의 일부가 되지도 않았다. (...) 그 옹호자들의 일차적 관심은 숙의 포럼 내부의 숙의 프로세스에 있다. 그들은 대체로 더 큰 사회의 구조적 특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 **숙의 민주주의의 '체계적 전환'(systemic turn):**
  - "숙의 시스템의 다양한 부분들을 가로지르는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필요"(Mansbridge et al. 2012: 26)
  - 체계적 전환 이후 민주적 혁신의 새 방향:'**참여적 숙의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liberative democracy**, Lafont 2019)'
    - ① 미니퍼블릭과 의회 등 엘리트 의사결정 기구와의 적절한 결합(coupling) 및 제도화
    - ② 미니퍼블릭과 전체 공중 및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과의 결합: 원활한 숙의 민주주의 작동을 위한 미디어, 전문가, 이익단체 역할 재조명
    - ③ 시민발의와 시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의 결합을 통한 대안적 해법 모색
    - ❖ **아일랜드 시민의회**, 미국 오리건주 시민발의리뷰 제도, 핀란드 시민발의제 등 주목

민주적 혁신이란 무엇인가?

- 스미스(Smith 2009, 1):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 및 심화할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도들"
- 엘스텁·에스코바(Elstub and Escobar 2019, 14): "참여, 숙의, 영향력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거버넌스 과정에서 시민들의 역할을 재구성하고 심화하기 위해 고안된 과정이나 제도들"
  - ❖ Cf. 김의영 외(2015:): '시민정치' = "시민이 주체가 되어 다양한 참여와 협치 방식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광범위한 정치적 행위와 과정"
- 김주형 · 서현수(2021): "시민참여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전통적 대의제 정치를 쇄신하고 재구성하려는 제도, 과정, 운동"

민주적 혁신의 실천적 유형과 사례(Smith, 2009)

① **민회(Popular assemblies)**: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시카고 공동체 치안회의(Chicago Community Policing),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ing) 프로그램 등 모든 시민에게 열려있는 공공 포럼들로 면대면 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에 도달

② **미니퍼블릭(Mini-publics)**: 무작위 선택(random selection) 방식을 통해 구성된 숙의 민주주의적 시민 포럼.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합의회의(consensus conference), 시민배심원, 시민패널, 플래닝셀, 공론조사(deliberative polls) 등.

③ **직접 입법(Direct legislation)**: 시민투표와 시민발의

④ **E-Democracy**: 21세기 타운 미팅, 온라인 공론조사, 온라인 투표 등 정보통신기술(ICTs) 기반의 시민 참여 기제와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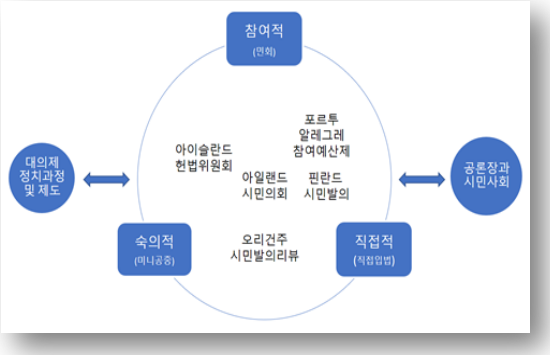
❖ 제도화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시민참여와 사회운동들: 스페인 M15 운동, 한국의 '촛불 집회' 등; DIY 민주주의, 새로운 도시적 시민 행동주의 및 '제4섹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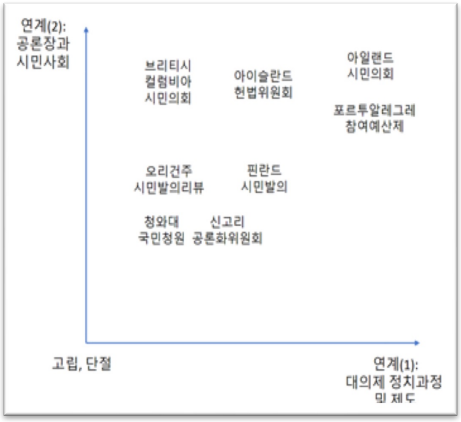
민주적 혁신의 유형과 국내 대표 사례(김주형·서현수, 2021)

〈표 1〉 민주적 혁신의 중심 가치와 대표 유형

중심적 지향	대표 유형	대표 하위유형	국내 대표 사례
참여적	민회	참여예산제, 타운홀 미팅	참여예산제, 주민자치회
숙의적	미니공중	공론조사, 시민의회, 합의회의, 시민배심원, 계획위원회	공론화위원회, 합의회의, 시나리오 워크숍
직접적	직접입법	시민투표, 시민발의[7]	주민발의, 주민투표, 국민동의청원[8]

‘혼종’과 '연계': 민주적 혁신의 주요 사례 분류
(김주형, 서현수, 2021)





민주적 혁신 관련 논쟁의 차원과 쟁점(서현수 외, 2019)

차원	쟁점
투입 정당성 차원	• 누가 민주적 혁신 기제의 실험 또는 제도 도입을 발의하고 주도하는가? • 민회에 참여하는 공중 또는 미니퍼블릭의 선발 방법이나 절차적 요건 등과 관련하여 어떤 제도적 디자인을 채택할 것인가? • 혁신 기제들이 얼마나 대표적이고 포용적인가? • 특정한 제도적 디자인이 실행 과정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행 과정의 정당성 차원	• 민주적 혁신의 실행 과정이 얼마나 공정하고 숙의적인가? • 정부 기구, 포럼 의장, 중재자와 전문가, 그리고 미디어 등이 어떤 중간적 역할을 수행하는가? • 정부, 의회, 정당 등 기성 대의 기관들이 새로운 시민 참여 메커니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산출 정당성 차원	• 새로운 혁신 메커니즘들이 제도적으로 공고화되고, 시스템 수준의 효과들이 관찰되는가? • 민주적 혁신 프로그램이나 제도 도입 이후 어떤 직, 간접적 정책 효과들이 나타났는가? • 민주적 혁신 기제를 활용한 참여 경험 이후 시민들이 더 계발되고(enlightened) 더 공공 사안에 관여하는 변화가 일어났는가? • 새로운 민주적 메커니즘들이 포용성(inclusiveness), 시민적 통제, 숙고된 판단, 투명성과 같은 민주적 공공재(democratic goods) 혹은 가치들을 충분히 의미있는 수준에서 산출하는가(Smith 2009)?
전반적 정치 제도와 문화의 혁신 가능성	• 제도적, 문화적 컨텍스트의 차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의 이전가능성(transferability)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미니퍼블릭 등 민주적 혁신 기제를 기존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의 공식 의사결정 기구에 연결 또는 통합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가?

연구의 목적과 핵심 연구질문

-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심화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민주주의의 혁신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숙의 민주주의적 시민 참여 기제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는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의 제도화 가능성과 방안을 탐색
- 특히, 2011년 학계와 시민사회 주도로 첫 시민의회를 소집, 실험한 뒤 2023년 현재까지 6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제도적 디자인, 실행 과정, 결과와 효과성의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취를 보여온 아일랜드 시민의회(Irish Citizens' Assembly) 모델의 특징과 함의를 체계적으로 규명

1. 아일랜드는 왜 그리고 어떻게 시민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는가?
2. 제도적 디자인, 실행 과정, 결과와 효과성의 측면에서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다른 시민의회 실험 사례나 공론조사, 합의회의, 시민패널 등 대표적인 숙의 민주주의 포럼 사례들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징은 무엇인가?
3. 아일랜드 시민의회가 민주적 혁신과 숙의 기제의 제도화 전망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던지는가?

사례 분석: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의 특징과 함의

- 1차: 금융위기 후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의회 실험 프로젝트 전개(2011년)
- 2차: 헌법 회의(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설립, 운영(2012-2014)
- 3차: 아일랜드 시민의회(Irish Citizens' Assembly, 2016-2018)
- 4차: 의회 주도로 성평등에 관한 시민의회 운영(2020-2021)
- 5차: 생물다양성 상실에 관한 시민의회(2022.4.-2023.1.)
  - ❖더블린 시민의회(Dublin Citizens' Assembly, 2022.2.-2022.10.)
- 6차: 약물 사용에 관한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 on Drugs Use, 2023.2. – 현재)

1차: 금융위기 후 시민사회 주도의 시민의회 실험 프로젝트 전개(2011년)

-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헌법개혁의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었고, 2011년 총선에서 제 정당들이 브리티시컬럼비아시민의회(BCCA)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 시민 주도 헌법개혁을 공약함.
- 그러나 총선 이후 시민의회 모델에 대한 회의로 인해 제도적 진전이 없자 민주적 혁신 전문가인 David Farrell, Jane Suiter, Eoin O'Malley 등 일군의 정치학자들과 혁신 활동가들의 주도로 **"We the Citizens"** 라는 실험적 프로젝트를 실시함. (캐나다, 네덜란드의 시민의회 실험 사례로부터의 영향)
- 2011년 5-6월 동안 여러 도시에서 7차례의 참여적 시민 모임을 갖고 ① 선거제도 개혁 및 의회 의원들의 역할, ② 정치인들의 정체성, ③ 경제 위기 시기의 증세 또는 예산 삭감 사이의 조정 등을 주제로 숙의한 뒤 헌법 개혁을 위한 시민의회 설립을 요구하는 보고서 발표.

2차: 헌법 회의(Convention on the Constitution) 설립, 운영 (2012-2014)

-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Fine Gael/노동당 연합정부가 학계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거쳐 헌법 개혁을 위한 시민 회의를 소집
- **무작위 선발된 66명의 시민대표와 여러 정당을 대표하는 33명으로 구성**(52명의 의원이 순환하며 참석) + 1명의 위원장(의회 의장): 시민사회와 정치권 간 타협의 결과

- **2013년 1월 첫 숙의 세션에서 헌법 조항과 연계된 10개 의제 선정(정부 의제 8, 자체 선정 의제 2)**
  - 대통령 임기 축소
  - 선거연령 인하
  - 가정 및 공공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
  - 여성의 정치 참여 증진
  - 동성결혼
  - 선거제도 개혁
  - 대통령 선거 시 해외 교포 및 북아일랜드 거주자 투표권
  - 신성모독 (폐지)
  - Dáil (아일랜드 하원) 개혁
  -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 타협적 의제선정: 갈등적이거나 아주 중요한 정치개혁 의제는 제외
-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조력을 받아 주말을 활용한 연속적 시민 숙의(소규모 토론 포함) 후 정부와 의회에 권고
- 권고안 중 3개만 국민투표에 회부: ①동성결혼 허용, ②대통령 출마자격 연령 낮추기(35세->21세), ③신성모독 폐지 등 → "선택적 청취"라는 비판 제기
- 결과: ①, ③은 각각 61%, 65%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 성공; ②는 대중적 인식 결여와 공론화 제한으로 부결

3차: 아일랜드 시민의회(Irish Citizens' Assembly, 2016-2018)

- 2016년 총선 이후 2차 시민의회 설립, 운영
- 1명 의장(대법관) + 99명 무작위 선발된 시민대표로 구성: 낙태 이슈의 휘발성으로 인해 정치인들 참여 회피
- 5개 의제에 대한 숙의 임무 부여:
  - 헌법상 낙태 금지 조항 폐지
  - 고령화의 도전과 기회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
  - 기후 변화에 대한 국가적 대응
  - 국민투표 실행 방식
  - 의회 임기 고정

THE IRISH CITIZENS' ASSEMBLY PROJECT

- 의제 수 축소: 10 → 5; 열린 의제(기후위기, 고령화 등) + 닫힌 의제(낙태)의 결합
- 2016.11.-2017.4.까지 낙태 의제 심의:
  -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서 첨예한 갈등 이슈: **12,000개 넘는 의견서 제출**, 찬반 진영 캠페인 치열
  - 비밀투표로 시민의회 의견 결정: 64% 낙태합법화 찬성
  - 권고안 의회 제출: 의회 심의 후 같은 의견으로 국민투표 회부
  - **국민투표 결과 66.4% 찬성으로 헌법 개정**: 역사적 성과로 평가

4차: 의회 주도로 성평등에 관한 시민의회 운영(2020-2021)

- 2019년 7월 의회가 성평등에 관한 시민의회 소집을 결의한 뒤 2020년 1월부터 활동
- 99명 시민대표+1명 의장(총리 임명)으로 구성했으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온라인 중심 숙의 과정을 진행한 뒤 2021년 4월 대정부 권고 발표.
- 의회가 부여한 숙의 의제들:
  - 젠더 차별을 촉진하는 규범, 태도에 도전하기
  - 젠더 불평등을 야기하는 경제적, 임금 규범을 해체하기
  - 여성의 온전하고 효과적인 참여 및 동등한 리더십 기회를 보장하기
  - 구조적 임금 불평등을 조사하기 등
- 주요 권고 내용:
  - 헌법의 "가정 내 여성의 위치" 조항 폐지
  - 사회의 자연적, 근본적 기초 단위로서의 가정에 대한 헌법 조항 개정
  - 헌법 기본권 챕터 중심에 성평등과 차별금지 조항 삽입
  - 돌봄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 피해자/ 생존자 독립 옹호기구 설립
  - 모든 선출직 대표들을 위한 모성 휴가 도입
  - 시간당 성별 임금 격차 감축
  - 아동 돌봄 지원 정책 강화 등 다수 제도적 개혁 조치를 권고

5차: 생물다양성 상실에 관한 시민의회(2022.4.-2023.1) + 더블린 시민의회(2022.2.-10.)

- 2022년 2월 의회가 하원 토론 및 상하원 결의를 통해 소집: 정부 프로그램에 포함된 4개의 시민의회 중 하나로 1명의 의장과 99명의 시민대표로 구성
- 생명다양성 상실 문제에 대한 국가 대응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새로운 "국가 생명다양성 행동계획 " 을 수립하고, 이 사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표
- 2023년 1월 마지막 회의를 갖고 합의 및 투표를 통해 159개의 권고안 발표: 권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시민의회는 **3차례의 더블린 자연 현장 탐방**을 실시했으며,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해 주요 **분야별 접근법(sectoral approach)**을 취함. 또한, **Voices** 프로그램을 도입해 30개 이상의 단체와 정책이해관계자들의 관점과 의견을 청취함.
- **생명다양성 상실에 관한 아동청소년 시민의회**를 함께 운영: 7-17세 아동, 청소년 35명으로 구성됨. 공동의 조사연구와 숙의를 거쳐 보고서와 함께 58개 행동 요구사항 발표
- **더블린 시민의회(2022.2.-10.) 병행 운영**: 정부 프로그램에 따라 의회 결의로 소집. 더블린에 걸맞는 직선 시장과 지방정부 구조의 유형에 대한 숙의 및 권고. 67명의 더블린 시민대표(random selection) + 12명의 더블린시의원 + 1명의 의장으로 구성.

Children and Young People's Assembly on Biodiversity Loss

6차: 약물 이용에 관한 시민의회(2023.1.-현재)

- 2023년 4월 아일랜드 의회의 결의를 통해 약물 이용(drugs use)에 관한 시민의회를 소집, 운영 중.
- 1명의 의장과 99명 시민대표로 구성되며, 2023년 12월까지 활동 후 불법적 약물 이용이 끼치는 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권고하도록 임무가 부여됨.
- 2023년 10월 21-22일 마지막 회합을 갖고 최종 투표와 합의를 통해 권고안을 채택할 예정.
- 6개월 간의 숙의 과정에서 120명이 발표했고, 약 200시간의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약 800건의 의견서가 제출됨.

아일랜드 사례의 특징과 함의

- 세계 최초의 **연속적 시민의회** 소집, 운영(6회 연속):
  - 학계와 시민사회 주도의 첫 실험 → 정부와 시민사회 간 합의 → 정부 주도 → 의회 주도: 의회 결정resolutions에 근거함으로써 법적, 제도적 기반 안정화
  - ❖ 2019년 벨기에 독일어권 공동체(German-Speaking Community of Belgium)에서 세계 최초의 상설 시민의회 설립
  - ❖ 2022년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도 기후위기에 관한 상설 시민의회 설립
  - ❖ 영국과 **프랑스의 기후위기 시민의회** 설립 등에 영향

- **무작위 선발된 시민대표 + 의회(정당) 대표**로 구성되는 숙의 포럼의 가능성(2차 시민회의 & 더블린 시민의회): 의회와 정당을 반드시 우회하지는 않는 방식으로 유연한 제도적 디자인 가능성 시사

- 6개월-1년 정도의 충분한 숙의 기간을 보장하고, 정부나 의회가 제시한 다수의 의제 외에도 시민의회 구성원들이 합의해 추가적 의제를 숙의할 수 있도록 보장
  - 의제에 대한 시민 통제 가능성 증진
  - 점차 단일 의제에 대한 시민의회를 별도 설립하고, 해당 의제의 복합적 세부 쟁점을 충실히 숙의, 토론한 뒤 권고에 이르도록 함.
  - 현장 탐방, 다양한 정책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적극 경청, 아동청소년 시민의회 실험, 더블린시 차원의 시민의회 병행 운영 등 회를 거듭하면서 운영 방법의 지속적 혁신 시도
- **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와 직접 민주주의(국민투표) 기제의 결합**을 통해 동성결혼 허용, 낙태죄 폐지 등 헌법적 수준의 제도 개혁 실현에 성공
  - Cf. 브리티시컬럼비아시민의회, 온타리오시민의회, 아이슬란드 헌법회의 등과 대비
- 시민의회 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선택적' 국민투표 회부,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 경향에 대한 비판,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개혁 의제에 대한 우회 등 일부 한계와 도전과제도 관찰됨.

결론

- 시민의회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개별 민주적 혁신 모델이나 사례는 현대 민주주의의 심화 발전을 위한 잠재력과 한계를 모두 갖고 있음. 완벽한 사례는 없으며, 따라서 민주적 혁신의 미래지향적 요소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일 수 없음. 그러나 이 때문에 민주적 혁신 담론 전체에 대해 냉소적으로 등 돌릴 필요는 없음.
- 현 시기는 현대 민주 정치의 위기이자 전환기임을 인식하고, 확립된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과 새롭고 대안적 형태의 포스트-대의민주주의 간의 긴장과 다이내믹을 진지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표준적 대표 기제의 혁신적 재구성과 더불어 현대 민주주의의 미래를 모색하는 정치적 실험들을 더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지속적인 방식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시민의회(Citizens' Assembly)는 최근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주목받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체계적 연구의 가치가 있음.

-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시민의회와 온타리오 시민의회, 그리고 아이슬란드 헌법회의 실험의 계보를 이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에 걸쳐 다양한 의제와 방식으로 연속 실험되고 있는 아일랜드 시민의회 모델은 제도적 디자인, 실행 과정, 그리고 결과와 효과성 측면 등 다층적 수준에서 독특한 특징을 보이며 잠재력있는 민주적 혁신 모델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특히, 카톨릭국가로서 보수적 문화를 간직한 아일랜드의 역사적, 정치적 맥락에서 낙태죄 폐지와 동성결혼 합법화 등 첨예한 논쟁적 이슈들에 대해 시민의회 방식의 시민적 숙의 프로세스와 국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 기제를 결합해 정당성있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큰 의의가 있음.
- 무엇보다, 숙의 민주주의의 '체계적 전환' 이후 민주적 혁신의 새 방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참여적 숙의 민주주의**'의 요청과 관련하여 아일랜드 시민의회는 1) 미니퍼블릭과 의회 등 엘리트 의사결정 기구와의 적절한 결합(coupling) 및 제도화, 2) 미니퍼블릭과 전체 공중 및 민주주의 숙의 시스템과의 결합, 3) 시민투표 등 직접 민주주의 기제와의 결합을 통한 대안적 해법 모색 등 세 측면 모두에서 소중한 통찰과 정치적 상상력을 제공함.